

중·소상공인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조달 규제혁신



- 중 · 소상공인 민생활력 제고 -

공공조달 규제혁신

보고 순서

- 01 공공조달 현황
- 02 문제점
- 03 조달규제 혁신 방안
- 04 개선 사례
- 05 기대효과
- 06 향후 관리방안

01 공공조달 현황 : 공공조달이란?

| 국가기관이 **공익**을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

- ◆ 국가 물자의 안정적 획득 · 유통

- ◆ 국가 재정 집행의 투명성 확보

- ◆ 양질의 공공물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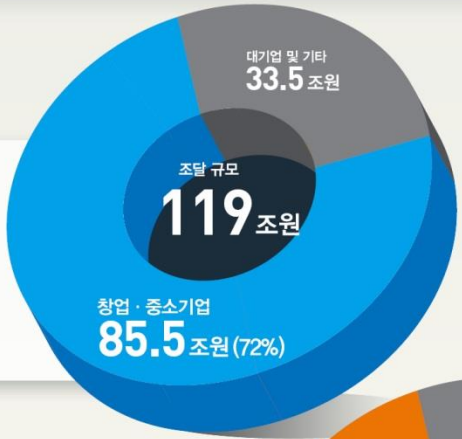
- ◆ 기업의 판로 확보 등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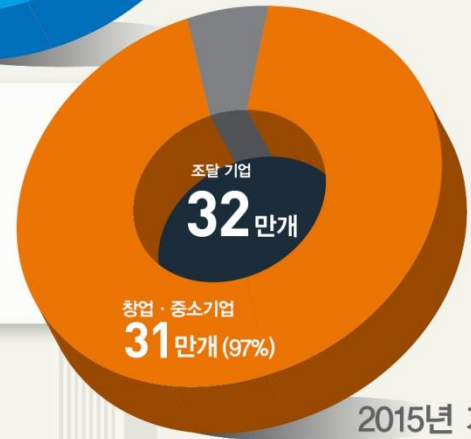
기업

01 공공조달 현황

공공조달 119조원 중
창업·중소기업 85.5조원



조달 등록기업 32만 중
창업·중소기업이 31만 (전체 중소기업 중 10%)



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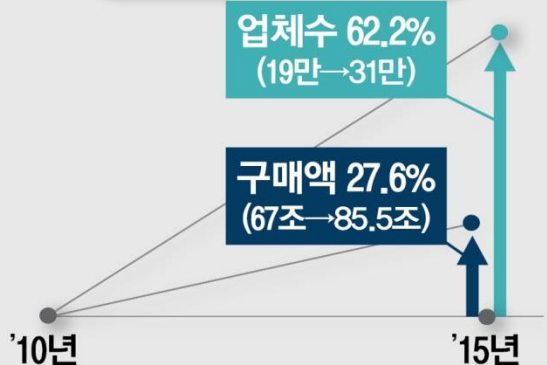
공공조달은 창업·중소기업의 '생존 수단'

02 공공조달 문제점

최근 5년간 조달
업체수 62.2% 증가
구매액 27.6% 증가

▶ 공급과잉으로 '출혈 경쟁'

중소기업 참여 및 구매액



중소기업 조달비용
연평균 43백만원

▶ 매출액의 4.3%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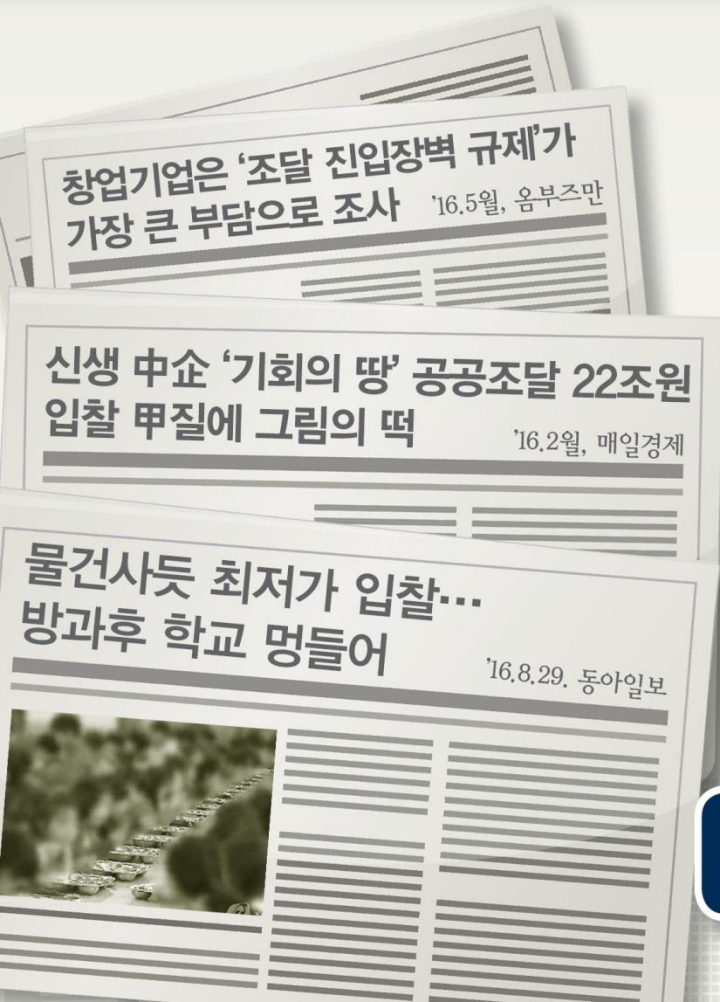
조달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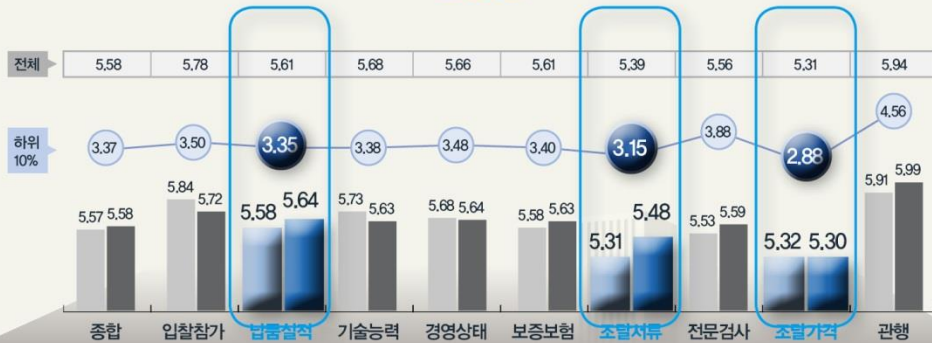
* 중소기업음부즈만 조달비용 부담률 조사 ('16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4년 기준)

02 공공조달 문제점



중소기업 조달 만족도 **5.6점** (10점 만점) ('16.5월, 옴부즈만)



창업 · 벤처기업 공공조달 불만 증가

03 조달규제 혁신 방안 : 국가계약 도입 21년만의 전수조사

민관합동 TF 구성 · 운영

*국조실, 기재부, 행자부, 조달청, 중기청,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조달연구원

Bottom-up

조달현장 건의 접수



32만 조달기업
규제건의 분석
130여건

*최근 3년간 조달기업 건의 수렴(옴부즈만)

Top-down

'15년 사업 전수조사



직접조달 사업
심층분석
5만6천건

*중앙 · 지방 25개 공공기관

Top-down

계약법령 전수조사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예규 등

공공조달 '규제 맵' 도출

03 조달규제 혁신 방안 : 공공조달 규제 맵

	01 입찰 이전	02 입찰	03 평가·낙찰	04 계약 이행	05 사후 관리
행태 개선	평가기준 미제시	업종제한 스펙알박기	중기간 경쟁 미이행 낙찰하한율 미적용	빈번한 과업변경 대가 감액	대금지급 지연
	사전규격 미공개	직접생산 기준 불합리	소기업 우대가점 미시행	과도한 저가투찰	지체상금률 연36.5%
제도 개선	신제품 등록 애로	최저가입찰		선금 미지급	
	과도한 실적요구	예정가격 편차율 초과	특정평가항목 과다 배점	높은 선금 채권 이자율 <small>*지방계약</small>	사후정산 요구
법령 위반	입찰공고 기한 위반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평가비중 자의적 설정	정산 기준 불일치	

03 조달규제 혁신 방안 : 정비 원칙

~~진입 장벽~~

- 과도한 실적요구
- 창업 · 소기업 차별

- ☑ 불필요한 제한 폐지
- ☑ 창업 · 소기업 우대

~~부당 조건~~

- 자의적 기준 적용
- 부당한 요구

- ☑ 합리적 기준
- ☑ 공정한 절차

~~제도 불일치~~

- 국가-지방 규정 불일치
- 국가-공공 규정 불일치

- ☑ 조달규정 일원화
- ☑ 상시 관리체계

조달규제 혁신으로 **창업 · 중소기업 성장 발판 마련**

03 조달규제 혁신 방안 : 정비 결과

6대 분야 139개 정비과제 확정



*기업 건의 중 '집단 이기주의', '중소기업 부담가중' 등의 과제는 불수용

'17년 3월까지 108개, '17년 6월까지 31개 조치 완료

* 법률개정 3건은 '17년 6월까지 국회 제출 기준

04 개선사례-1

1 진입장벽 완화

과도한 실적·규모 제한 개선

개선전 차량 12대 대여시 15,000대 보유업체로 제한



개선후 2.1억 미만 물품·용역 조달 실적·규모 제한 폐지



무분별한 통합발주 개선

개선전 옥외광고 제작과 전기설치공사 통합발주,
옥외광고업자 참여 불가



개선후 전문 업종별(광고업, 전기공사업)
분리발주 원칙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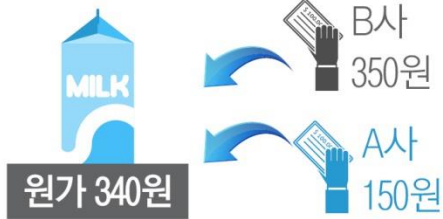


04 개선사례-2

2 진입장벽 완화

순수최저가 입찰제 폐지

개선전 최저가 입찰로 원가이하 입찰 빈번



개선후 2.1억 미만 물품공급 최저가 입찰 폐지



공공조달 입찰서류 간소화

개선전 입찰참가시 공통서류(22종) 외에 기관별 별도서류(36종) 요구



개선후 자체서류 36종 폐지 및 공통서류 온라인 제출 확대



04 개선사례-3

1 기업부담 경감


낙찰하한율 상향

개선전 물품 제조 낙찰하한율 80.5%로
소기업·소상공인 적정단가 미흡



적정단가
80.5%


개선후 물품 제조 낙찰하한율 84.3% 상향하여
적정단가 보장



적정단가
84.3%

중소기업 직접생산기준 합리화

개선전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매트리스'와 '커버'를
동시규정, 커버 생산업체는 매트리스 공장도 필요



매트리스공장 커버공장

개선후 커버 업체는 커버 공장만
갖추도록 품목분류 세분화



매트리스공장 커버공장

04 개선사례-4

2 기업부담 경감

창업·소기업에 차등적 가점 부과

개선전 대다수 공공기관은 '소기업 가점' 없음
*조달청 입찰은 소기업 가점 부여

대기업 98점 소기업 97점+가점?

개선후 물품구매시, 창업·소기업 우대가점 의무화

대기업 98점 소기업 97점 + 2점 가점

우대의 소상공인

국가-지방-공공기관 계약규정 일원화

개선전 국가, 지방, 공공기관 계약규정이 상이하여
조달업체의 혼란 야기

대한민국정부 korea.go.kr 공공기관 지방

개선후 국가, 지방, 공공기관 간 계약규정 일치

대한민국정부 korea.go.kr 공공기관 지방

04 개선사례-5

③ 기업부담 경감


검사·검수 완료 간주제 도입

개선전 검사·검수 지연으로 대가지급 지연 다수 발생



물품검수
14일 이내 ... ? →

개선후 특별한 사유없이 검사·검수 21일 경과시, 완료 간주




물품검수
최대 21일 →

지체상금률 절반으로 경감

개선전 공공계약 지체상금은 연 36.5%의 고리



개선후 지체상금률 절반으로 경감



04 개선사례 : 수요기관 및 기업의 평가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 간담회(10.24, 27)를 통한 검증

현장의 반응

공공기관

'검사·검수 간주제'는 공무원의 행정처리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것이라 기대되며, 결국 甲과 乙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함

* ○○공단

기업

실적제한, 최저가 입찰제도 폐지 등은 소기업·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진입기회 확대와 정당한 대금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봄

* ○○전기, ○○정보통신 등 기업

기업

직접생산확인 기준 정비는 영세한 기업의 불필요한 설비투자 부담을 경감하여, 창업·소기업 등이 다양한 업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람.

* 매트리스커버 제조 ○○기업

05 기대효과 (한국조달연구원 분석)

연간 3.1조원 경제효과, 기업당 1,060만원 혜택

1만 7천여개 '신규일자리' 창출, 6천여개 고용의 질 개선

진입
비용

시설·컨설팅 비용 등

조달시장 진입비용
3,007억원 절감



부담
경감

불필요한 조달서류 등

조달기업 부담
5,224억원 경감



매출
증대

공정대가, 사후 정산 금리 등

기업매출
8,871억원 증대



기회
확대

실적 제한 금지 등

창업기업 경쟁기회
1.4조원 제공



06 향후 관리방안

'신속 이행', '소통 · 체감', '지속 관리' = 근원적 개선

신속
이행

◆ '17년 상반기 중 모든 과제 정비 완료



→ 시행령 이하는 시행, 법률은 국회 제출을 '17년 상반기 중 완료

소통
체감

◆ 정비상황 실시간 공개 및 조달애로 상시 접수 · 처리



→ 규제포털 - 조달민원통합사이트 통해 조달기업과 지속 소통, 현장 체감 제고

지속
관리

◆ 상시 모니터링, 지원 체계 마련



→ 조달 전문기관 설치 통해,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 상담 · 지원

감사합니다

